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비기관 중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의 장이 집행한다.
- ㄴ.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 ㄷ.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실시대상 인력 중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훈련이 면제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 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ㄷ.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ㄹ.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사항에는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예측·평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아래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원조사 등)

-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 ④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은/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가)은/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다)에게 통보하고 (라)에 통고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②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무총리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④ 대통령	국회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공무원이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자원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에 우선한다.
- ②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이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있지만,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5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가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라면 해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가 비축한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요청은 중점관리대상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요청해야 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사용 요청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가) 이/가 (나)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 이/가 (라) 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받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지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 ㄴ.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이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ㄷ.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의 방법 및 절차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ㄹ. 정부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군의 지도 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군사 작전상 필요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는 포함되지만, “중앙관서의 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따로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재난사태를 정할 수 없다.

-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난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구호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사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안 정리 및 그 밖의 서무는 국무총리가 관장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담당하고 중앙민방위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다.
-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매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8월 말까지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확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망 보상금의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면 지급하는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한다.
- ㄷ.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ㄹ.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재해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민방위 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ㄴ.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ㄷ. 전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ㄹ.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은 때에 그 기간을 휴무로 한 고용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실비변상 및 실비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게 지급되는 그 밖의 실비는 숙박료와 교통비로 한다.
- ②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통합방위사태의 수습에 참여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되는 그 밖의 실비는 숙박료와 교통비로 한다.
- ③ 민방위법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한 경우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한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의 100분의 20을 그 민방위대원에게 연간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 등에서 구두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 ㄴ. 등화관제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전자의 경우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이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과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 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③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 ④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②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임무를 수행할 때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28. 예비군법령상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하지만,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동원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의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ㄷ. 동원명령 발령당시 동원명령 발령 지역의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해야 한다.
- ㄹ.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하며, 예비군표지장 중 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착용한다.
- ③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점퍼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10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지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방문 통보의 방법이 아닌 전화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32.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하지만, 긴급조치상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의 도주도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용이한 경우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휴업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업 보상금의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휴업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문 34. 예비군법령상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②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보다 우선적으로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예비군대원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④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민간의료시설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위원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 36. 예비군법령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대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③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다.
- ④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경찰서장은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스스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동원이 해제된다.

문 37.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에 작전지역에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예비군대원이 훈련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휘관은 (다)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라)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나)	(다)	(라)
①	2	100	1	30
②	2	500	2	30
③	5	100	1	50
④	5	500	2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ㄴ.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를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된 중기사업 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관리대상 지역에 대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ㄷ.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보 및 수문
- ② 「하천법」에 따른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 ④ 「어촌·어항법」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ㄷ.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① ㄱ(O), ㄴ(X), ㄷ(O), ㄹ(X)
 ② ㄱ(O), ㄴ(X), ㄷ(X), ㄹ(O)
 ③ ㄱ(X), ㄴ(O), ㄷ(O), ㄹ(X)
 ④ ㄱ(X), ㄴ(O), ㄷ(X), ㄹ(O)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 등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없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ㄱ(O), ㄴ(O), ㄷ(X), ㄹ(X)
- ② ㄱ(O), ㄴ(X), ㄷ(O), ㄹ(X)
- ③ ㄱ(X), ㄴ(O), ㄷ(X), ㄹ(O)
- ④ ㄱ(X), ㄴ(X), ㄷ(O), ㄹ(O)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ㄷ.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ㄹ.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에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직원의 출동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조치는 명할 수 없다.
- ③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헬기의 운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 ④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② 해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특별재난 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지원할 수 있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가) 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동법 시행령 제75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다)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라) 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마) 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u>(마)</u>
①	1	100분의 1	100분의 10	15배	100분의 5
②	1	100분의 5	100분의 10	15배	100분의 1
③	3	100분의 1	100분의 15	10배	100분의 5
④	3	100분의 5	100분의 15	10배	100분의 1